



글로벌 REACH 확산에 미리미리 대응하자!

REACH 신고제도 대응을 위한 구체적 해법 제시

개요

- 지식경제부(장관 : 이윤호), 환경부(장관 : 이만의), 중기청(청장 : 홍석우)은 우리 수출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규제인 REACH*에 대한 대응 해법을 제시코자 對 EU 및 일본·중국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'제3차 REACH 대응 엑스포'를 9.25(금)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최하였음



※ REACH(Registration, Evaluation,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)는 EU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(ECHA)에 등록하도록 하는 EU의 新 화학물질관리제도로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며, 특정물질은 신고·허가·제한 대상이 됨.

국내 REACH 대응 현황

- EU의 REACH제도는 사전등록을 완료('08.6.1 ~ 12.1)한 이후 본등록·신고·허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음.
- 특히, 지난 9월1일에는 유럽화학물질청이 REACH 신고대상물질(SVHC) 목록에 추가될 수 있는 후보물질 15

중을 선정·공개('09.9.1)하여 현재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임.

※ REACH 신고(Notification) : 완제품내의 고위험성우려물질(SVHC,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)의 함유에 따라 해당물질의 정보를 ECHA에 제출하는 절차

- 또한 EU REACH의 시행 이후, 최근 중국,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서도 자국 화학물질제도를 REACH와 유사한 형태로 강화하는 움직임이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이므로 EU뿐만 아니라 타지역 수출업체에서도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

향후 추진계획

- 이번 REACH 엑스포에서는 EU·중국·일본 등 해외 REACH 최신동향, 본등록 및 신고제도의 구체적 대응방안 등이 소개하였으며, 국내 주요 컨설팅 업체와의 1:1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참가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
 - 특히 완제품 내에 신고 대상물질의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양식과 운영시스템을 소개하는 한편 EU의 각 회원국 별로 제정되는 REACH 하위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수집이 어려운 중소 수출업체의 EU 국가별 대응을 돕고자 함
- 작년 5월부터 지경부·환경부·중기청이 공동 운영 중인 'REACH 대응 공동추진단은 국내기업의 REACH 대응을 지속적·체계적으로 지원·점검하고 있으며,
 - 하반기에도 REACH 엑스포와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국내 수출업체의 REACH 대응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할 예정임

